

민주 “‘고발사주’ 의혹尹 수사해야”

녹취록에 추악한 비밀 드러나 국민의힘에 김웅의원 제명 촉구 “검찰 쿠데타 민낯 밝히겠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고발사주’ 의혹 당사자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 간의 통화 녹취록을 고리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집중공화화를 쏟아냈다. ‘대장동 의혹’으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통화 녹취록을 계기로 민주당은 다시 공격에 나서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복구한 두 사람의 통화 녹취에서 김 의원이 ‘우리가 고발장을 보내주겠다’, ‘내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니 속 빠져야 한다’ 등의 녹취록이 보도되면서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

서 “윤석열 검찰이 덮고 싶은 추악한 비밀이 공개됐다”며 “국민의힘은 즉시 김 의원을 제명하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주 정책위의장은 “우리가 남이가 했던 초원복집 발언 이후 가장 무서운 말”이라며 “완벽한 각본을 짜준 당사자는 최근까지 기억 안 난다는 일관된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우롱했다”고 맹비난했다.

김영배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모든 정황의 처음과 끝에 윤 전 총장이 있다”며 “이제 진실의 문턱에 와있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정치 검찰 총장과 검사들의 선거 개입 시도와 검찰 쿠데타의 민낯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했다. 이상호 의원도 “이제는 윤 전 총장의 개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며 “공수처에 윤 전 총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고발사주의혹을 ‘검찰의 명백한 정치 개입이자 선거개입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국감 기간 진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손준성 검사와 김 의원 개인이 벌인 일이 아니라 ‘윤석열 대감’이 기획하고 국민의힘을 배우로 섭외해 국정농단을 일으키려 한 사건”이라며 “윤석열, 손준성, 김웅 모두 책임지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 힘은 당명을 ‘국민기만당’이라고 바꿔야 한다”고 비판하면서 “앞으로 예정된 대검·공수처·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에서 “이번 사건을 덮으려는 세력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조 씨가 제보하도록 사주했다며 ‘제보사주’라는 희한한 프레임을 들고나왔다”며 “정부 고발은 사정기관이 공권력을 사유화한 현대의 국기문란 사건이다. ‘제보사주’라는 또 하나의 수사 연극에 놀아날 국민은 이제 없다”고 비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7일 오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 간 통화 녹음 파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오늘 4명 확정...당원투표율에 희비 갈릴듯

최종 투표율 50% 넘을 것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2차 예비경선(컷오프)에서 당원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7일 당원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마무리하고 8일 오전 본선 진출자 4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당원 투표 30%, 일반시민 여론조사 70%를 합산한 결과다.

2차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당원 선거인단은 37

만9000여명으로 전날 모바일 투표율은 38.77%에 달했다.

이는 모바일 투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치라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흥행 돌풍’을 일으켰던 6·11 전당대회 투표율(모바일 36.16%, 최종 45.3%)을 훨씬 웃도는 수치이기도 하다.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이날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까지 추가로 진행하면 투표율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원 대상 ARS 투표는 통상적으로 10~15% 안팎 투표율을 보인다”면서

“모바일 투표 결과와 합산하면 최종 투표율은 5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적극 투표 성향을 보이는 당원 투표의 성격을 고려하면 이는 향후 본 경선 흥행을 좌우하는 가능성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경선은 당원 투표 비중이 높아져서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가 절반씩 반영된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6·11 전대에 참여한 기존 당원 28만 명 외에 8월 말까지 당비를 내고 2차 컷오프에 새로 참여하는 10만 명의 표심이다.

이들은 당원 배가운동을 벌인 이준석 체제에서 온라인으로 당원이 된 20~40대가 많다. 지역적으로도 수도권과 호남에서 신규 유입이 많아 투표율이 높으면 당심과 민심의 괴리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국감 브리핑

중기 정책자금 지원 지역간 격차 극심

송갑석 국회의원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역간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서구갑) 국회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권역별 정책자금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호남·제주 권역의 정책자금 지원액은 전체 24조 2,803억원 중 13%에 불과한 3조2748억원으로 수도권과 영남권, 충청·강원 권역과 큰 차이를 최하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에는 전체 정책자금 지원액의 39%에 달하는 9조4415억이 투입됐다. 영남권은 32%인 7조7881억원, 충청·강원권은 16%인 3조7759억원이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정책자금 지원금 증가



율도 큰 격차를 보였다. 수도권은 2016년 1조6173억원에서 2020년 2조5636억원으로 59% 증가했고, 같은 기간 영남권은 1조3311억원에서 2조698억원으로 56%, 충청·강원권은 7467억원에서 8926억원으로 20% 늘었다.

반면 호남·제주권은 2016년 8561억원에서 2020년 7641억원으로 11% 감소했다.

송갑석 의원은 “정책자금은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과 운전자금 마련 등 중소기업 경영을 위한 공적 자금 지원의 핵심”이라며 “자금 조달이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정책자금 지역별 쿼터제 도입 등 균등 배분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이양직불제, 어촌 특성 고려 않는 탁상행정

서삼석 국회의원

해양수산부의 경영이양직불제의 엉성한 탁상행정과 성과 부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영이양직불제의 취지는 어업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 어업인의 유입 촉진을 취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 때문에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전체 대상 29,751명 중 7명이 신청해서 6명이 약정서를 체결한 것이 사업 실적의 전부이다.

서 의원은 “평균 수명 100세 시대이자, 어촌 지역의 고령화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으로 고령어업인의 소득안정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후계 어업인 유입도 못하고 있다.”며 경영이양직불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 전국 어촌계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경영이양직불제의 대상연령인 65세 이상부터 75세



까지가 전체의 23.9%(29,751명)를 차지하며, 경영이양직불제 대상보다 나이가 많은 인구도 전체의 18.9%(23,544명)에 달한다. 65세에는 10년 지원, 64세 9년 지원하는 방식으로 75세미만까지만 지원된다.

서 의원은 “실제 어촌계원으로 어업보상, 배당, 어업활동 등 더 많은 혜택이 있는데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할 이유가 없다. 마을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축소될 이에 상응하는 혜택이 없는데 누가 경영이양직불제를 신청하겠는가”라면서 “후계를 양성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 기여라는 사업의 취지에는 백퍼센트 동의하지만, 엉성한 탁상행정으로 사업의 취지도 못살리고 정부의 수산업 살리기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일이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민의당 대선기획단 출범...안철수 출마 수순

국민의당은 7일 대선 전략을 수립하고 당내 후보 선출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대선기획단을 출범시켰다.

대선기획단장은 최연숙 사무총장이, 부단장은 유주상 사무부총장이 각각 맡는다. 홍성필 정책위의장, 안혜진 대변인, 김윤 서울시장위원장, 송영호 당대표 법률특별보좌역, 김건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등은 위원으로 합류한다.

안혜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 안팎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청년 3명, 여성 5명, 외부 전문가 등 총 14인으로 기획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당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이나 대선 실무 준비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안철수 대표가 사실상 대선 출마를 위한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 당헌은 대선 1년 전 당 대표직에서 사퇴해야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제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된 셈이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현장에서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다”며 “대답이 준비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상가매매 (상무지구)

- 40평(전용) **2억5천**(용1억)
보1천 월100
- 60평(전용) **4억5천**(용3억)
보2천 월200
- 140평(분양) 시세 **9억**
매가 **7억**(용4억)
월수익 280만(보4천)

(사무실 리모델링, 바, 유흥, 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010-6670-9800

장성 토지(매매 분양)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대출가능)

[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

010-6670-9800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
각서·운송료·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
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수수료 없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발목펌프

특허받은 표준형

발목펌프는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의 각종 성인병을 완전 해결시켜줍니다. 직경 10cm, 길이 30cm, 높이 70cm 편백나무 반원에 운동하는데 층간소음이 지장이 없는 운동효과가 확실한 특허 표준형입니다.

- ★특허등록 제30-0630153 발목운동기구
- ★특허등록 제30-0636197 발목운동기구

표준형 발목펌프+타이머 **가격 40,000원**
표준형 발목펌프 **가격 25,000원**
편백검침 스폰지 부착 **가격 13,000원**

제일건강 010-7510-2000
광주 남구 서문대로 687 수협 2층